

#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고발... 법 확대해석 논란

### '준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낸 자료 근거로 '카카오 김범수' 댐 고발 안해 검찰과 마찰 두 기업 형평성 맞추려 무리한 고발 '의혹'

최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공시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 조치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공정위의 '떠넘기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년 본인회사(유)지음, 친척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8개 계열회사 자료누락 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누락이 발생, '경고' 조치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가 2015년 '준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네이버가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이 GIO를 고발한 것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준 대기업에 속하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포함된다. 기업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동일한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네이버는 2015년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분리하면서 총자산이 3조 4000억대로 줄었다. 때문에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졌고, 고의성이 없어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표면적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범위안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는 입장이냐, 이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시장경제DB

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에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하면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없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가 김 의장과 같은 사례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어 '떠넘기기' 식으로 수사기관에 공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사업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향후 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할 경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네이버가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기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동일한 혐의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의 사례로 비추보았을 때 이 GIO에 대한 고발도 유죄혐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이버 측은 "2015년 예비조사단계의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meconomynews.com

## 배터리전쟁 LG 승리 'SK조기패소' 판결



### 美ITC "영업비밀 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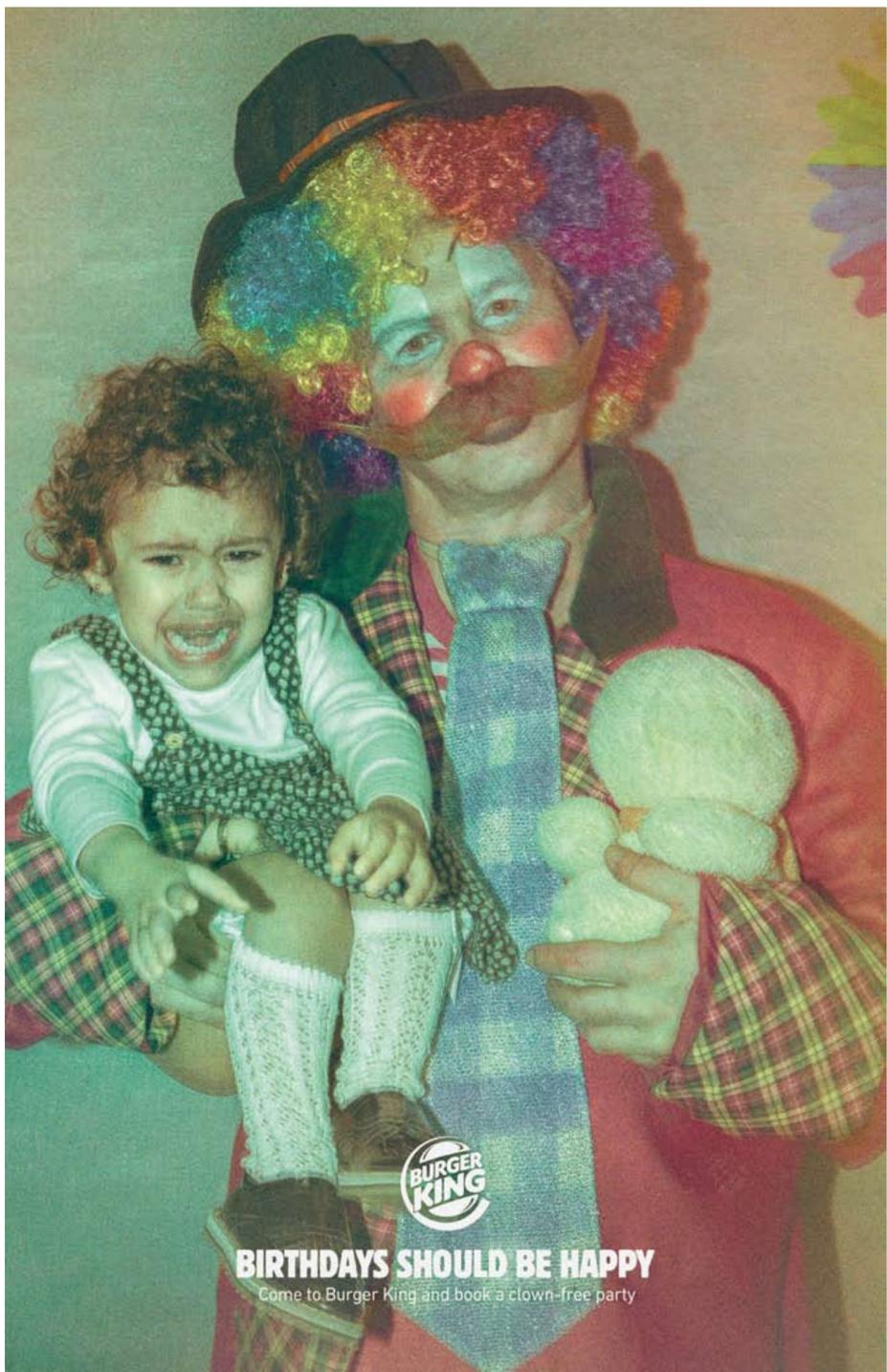
LG화학은 이 판결에 대해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훼손과 포렌식 명령위반을 포함한 법집행도둑행위 등에 관해 법적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패소 판결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TC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판단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호승 기자 yhs@meconomynews.com

##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Print & Publishing Gold Lion Campaign  
Title: BIRTHDAY 4 생일 4  
Client: BURGER KING 버거킹  
Agency: LOLA MULLENLOWE, Madrid  
Product: RESTAURANTS  
Copy: Birthdays Should be Happy  
Come to Burger King and book a clown-free party  
생일은 행복해야 합니다.  
버거킹 레스토랑에서 클라운-프리(광대 없는) 파티를 준비하세요.

## 강남 집값 올라? 내려?... 누구 말이 맞나

### 2월 2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구분	전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한국감정원	0.14%↑	0.01%↑	0.05%↓	0.06%↓	0.06%↓	0.01%↓
KB부동산	0.17%↑	0.14%↑	0.06%↑	0.12%↑	0.09%↑	0.27%↑

\*자료제공=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자료=KB부동산, 한국감정원 제공

### 한국감정원, 강남3구 아파트 하락폭 커져 KB부동산, 상승폭 줄었으나 상승세 유지 상반된 집값 통계로 시장 혼선 가중

한국감정원은 지난 13일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강남3구인 강남(-0.05%), 서초(-0.06%)·송파구(-0.06%)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신축도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양천구(-0.01%)가 집값 상승 피로감 등으로 지난해 5월 이후 37주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원 자료만 보면 서울 집값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같은날 "명절인 설날을 보낸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격은 차츰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남구(0.06%), 송파구(0.09%) 등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구로구(0.28%), 강서구(0.28%), 양천구(0.27%) 등이 순으로 다른 구에 비해 상승폭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상승폭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감정원과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두 통계 모두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감정원 통계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집값 통계로,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 추

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근거도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였다. 특히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시세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산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세 판단의 중요 자료다.

하지만 두 기관이 상반된 시세 자료를 내놓으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 가격 시세가 서로 다를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각 기관이 내놓는 자료의 장단점을 파악해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정원 통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올랐음에도 감정원의 매매가격 통계로 보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 대표적이다.

송학주 기자 hakju@meconomynews.com

##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일주일만에 73만장 차단

### 관세청, 통관대행 단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72건, 73만장의 반출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은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 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밀수가 잡혔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

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차단된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kwon@meconomynews.com